어느 독성세척제 집단중독 사업장 이야기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트리클로로메탄은 메탄의 수소 세 개가 염소 세 개로 바뀐 화합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클로로포름'이다. 이 물질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마지막 왕자를 낳을 때 마취약으로 쓰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화학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사용될 만큼 강한 독성을 지녀 지금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실제로 고농도의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 혼수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심박동이 정지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독성물질이다. 2015년 강간범이 10대 소녀를 모텔로 끌고 가 '수면마취'로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한동안 뉴스에서 사라졌던 이 물질이 지난해부터 다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공장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부품업체 2곳에서 잇따라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독성세척제를 사용하다 노동자 29명(A업체 16명, B업체 13명)이 급성중독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 1·2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노동자 급성중독 일으킨 사업장, 그 이후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A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자동차 부품업체인 B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 미이행)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다는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업체에 대한 공판이 이어지면서 같은 집단중독 사고가 발생한 B업체도 법원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6일 독성세척제 납품업자와 함께 B업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과 피해노동자의 진술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강 상태와 심정 등과 관련한

‘양형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던 날, 마산지원 형사1부는 하청 노동자 깔림 사고를 일으킨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선고다.

늦장 수사에 좀처럼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력이 살아나자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B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 혐의를 판결하기 전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치료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조사해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반복되는 사고,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B사 임원진은 피해노동자와 개별 접촉해 “우리도 약품을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도 되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개인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1)]

B업체가 내놓은 재해예방 대책도 논란이다. 노동자를 팀으로 묶어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고 산재로 ‘요양’하는 직원이 나오면 팀 전체에 벌점을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노조에서는 회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대표이사 형사처벌 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2월 A·B업체의 집단중독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세척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정해 집중 감독을 벌였다.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런 노동당국의 관리감독을 비웃기나 한 듯 올해 2월 28일 경기도 이천에서 또다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집단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5월부터 집중감독을 시행하는 대책을 또 반복하고 있다.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가 왜 시장에서 ‘친환경 세척제’로 둔갑해 팔리는지, 왜 다른 세척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지, 왜 독한 세척제를 쓰는 세척 공정 배기장치는 툭하면 고장이 나고 작동이 멈추는지, 방독마스크를 쓰고 내화학물질장갑을 착용한 노동자는 왜 찾아보기 힘든 것인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할 때다.

1) 매일노동뉴스 2023년 5월 3일. <‘독성 세척제 집단중독’ 법원 조사 시작되자 피해노동자 찾아가 “합의하자”>